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9년 2월23일(월)
통권29호(제2권 제7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남북 대결을 부르는 금강산 망각

며칠 전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메일 제목이 사뭇 비장했다. 「금강산을 부디 살려주시기를…」 내용으로만 본다면 언제 일지는 알 수 없지만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갈 수 있는 예약 상품에 대한 소개였다. 하지만 길지 않은 글이 준 느낌을 결코 간단치 않았다.

어릴 적 교과서에서 본 글인 듯하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현자(賢者)의 정답은 ‘망각’이었다. 망각은 무관심이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존재는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며, 세상에서 차지했던 모든 의미와 가치도 부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잊혀진다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차라리 미움을 받고, 원망을 받는 것이 잊혀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작년 7월 관광객 피격 사건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후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마저 높아가면서 금강산은 시나브로 우리에게 잊혀져가고 있다. 금강산으로 수학여행 혹은 신혼여행을 갔다는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아니, 이제는 우리가 언제 비무장지대를 넘어 금단의 땅인 금강산을 갔는지조차 믿겨지지 않는다. 금강산을 살려달라는 호소가 결코 마케팅 문구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피격 사건 전까지 금강산 관광은 당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몇 안 되는 견인줄 가운데 가장 굵은 줄이었다. 실제 금강산이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는 지렛대임을 입증하는 사례도 있었다.

남과 북은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연평도 해역에서 전사자까지 발생하는 군사적 충돌을 벌였다. 하지만 그때도 남북은 금강산 관광을 멈추질 않았다. 한마디로 서해에서는 전쟁을 벌이면서 동해에서는 유람선이 올라가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기묘한 상황이 더 이상의 대규모 무력충돌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 두 차례의 서해교전을 일과성 충돌로 마무리하도록 한 힘이 됐다.

물론 사전에 현대아산을 통한 메시지 교환이 있었다고 해도 서해상에서 정규군거리 무력 충돌까지 한 마당에 민간인의 관광을 허용하는 것은 남북 당국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남북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범퍼 역할을 할 무엇인가가 필요했고, 금강산이 그 역할을 한 것이다.

서로가 갖춘 무장력으로 봤을 때 전면전이 남북의 공멸을

의미함을 서로가 잘 알고 있기에 남은 남대로 서해교전 상황이 시급히,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수습되기를 원했다. 또한 북도 역시 자멸을 초래할 확전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은 물론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특히 2002년 2차 서해교전의 경우 이미 7:1조치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체제 내적으로도 북한이 시급한 사태 수습을 원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은 금강산 관광을 유지함으로써 서로에게 확전 의사가 없음과 정상적인 사태 수습 의지를 확인시켜주었고, 상황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 8개월에 접어들면서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서조차 멀어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지렛대 역할을 하던 금강산이 잊혀지고 있는 것이다. 관광지로만 본다면 금강산은 안 갈 수도 있다. 김주변의 산천도 가보지 못한 곳이 허다한데, 아무리 천하 절경이라고 해도 못간들 또 어떻겠는가? 하지만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다. 반세기 넘게 지속된 분단의 상처가 곪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며, 비틀거리면서도 남북이 함께 의지하며 견뎌 가는 지팡이다. 남북은 벌써 두 차례나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때문에서라도 금강산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핏 이번 금강산 예약 행사를 경영위기에 처한 민간기업의 자구적 마케팅 전략으로 치부하여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 내포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지렛대 역할을 인정한다면 이것을 결코 민간기업의 마케팅 차원으로 격하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면적 대결 태세’와 ‘즉각 보복’이란 폭력적 언사가 난무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더 금강산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국민적 운동으로 금강산을 되살릴 필요도 있다. 수신한 메일 말미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는 그래서 더욱 절절하다.

어제 TV 뉴스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연평도 어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것이 어찌 연평도 어민만의 목소리일까? 남북 당국의 기싸움에 떠밀려 망각의 강을 건너는 금강산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제29호 목 차

이주의 칼럼

경제 위기와 남북 경색----- 2

이주의 주요 기사

“클린턴, 北에 경고와 구매 메시지”<CNN>----- 3

난제 산적한 玄통일 ... 행보 ‘주목’ ----- 4

北매체 “美, 北핵억제력 무력제거 하려해” ----- 5

“北, 미국의 ‘관계정상화-평화협정’ 제안 거부”----- 6

北군부, 南에 “전면 대결태세 잊지 말라” ----- 7

북한, 개성공단 야근비 인상...두달 체불때 영업정지 ----- 8

“클린턴 北 후계구도 언급 금기 깨” <NYT> ----- 9

남북 군사력 비교...北 보유 장비수 우세 ----- 10

Obama to talk economy, North Korea with Japan PM ----- 11

“翻譯家”蓮池薫さん 北の映画事情語る 新潟 ----- 11

추천논문 / 2009년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과 남북한 협력과제 12

함께 보는 최근 북안단신 / -----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제96회 흥사단 민족통일포럼

▶주제 :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한 관계

▶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07:00

▶장소 : 세종호텔 3층 세종홀

●북한법연구회 제138회 월례발표회

▶주제 : 북한의 부동산 임대법과 외국인 투자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18:30

▶장소 : 뉴국제호텔 두메라룸

●2009년 제1회 남북경협본부 특별초청강연회

▶주제 : 개성공단 현황과 2009년 남북경협 전망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16:00

▶장소 : 우리함께빌딩

이 주의 칼럼

경제 위기와 남북 경색

박태균(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흔들리더니, 올 초 북한이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해상분계선 관련 조항의 무효를 선언했다. 그리고 북한은 우주개발은 자주권리라고 하면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물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로 현재 남북관계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한반도 내부적으로 한국의 북방정책과 소련의 공산정권 몰락으로 인한 북한의 위기가 결합하면서 가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중 관계 정상화가 중요한 외부적 조건이 되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과거처럼 견고한 ‘혈맹’ 관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까지도 양국 간에 긴밀한 공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올해 1월23일 중국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특사의 방문 시기가 1월17일의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과 1월30일 조평통의 선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즉, 현재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전개에 대해 중국이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경색은 곧 한중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92년 한반도 해빙 조건 중 하나가 한중 관계의 진전이었던다면, 2009년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냉전은 한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로 한미 관계의 변화이다. 92년 이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대북정책에 관한 한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부터 양국은 대북정책에서 엇박자의 길을 걸어왔다. 또 한미 동맹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정책 하에서 미군이 갖고 있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에 이양될 예정이다.

미국이 한미 동맹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 지금의 경제위기가 미국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미 행정부는 해외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주한 미군이 없는 한미 동맹까지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물론 지난 60년 간 남북관계는 어느 한 시기에든 편안했던 적이 없다. ‘60년 중 1년의 경색’이 아니라 ‘60년 경색 중 잠깐의 햇볕’이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던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시기, 그리고 6-15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도 북한 핵문제와 조문과동, 그리고 대북지원을 둘러싼 승강이로 회담 및 교류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이전보다도 더 시급하다. 2009년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모두 잃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이 한국의 미국·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곧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물론 접촉을 비롯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다. (이 글의 원문은 http://news.khan.co.kr/kh_news/kh_an_art_view.html?artid=200902191806265&code=990308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北, 스위스서 재생에너지 기술교육”<RFA>

-- 2월 16일 연합뉴스

북한 대표단이 오는 3월 스위스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기술교육을 받게 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북한에 재생에너지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아가페 인터내셔널(Agape International) 관계자는 이날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대표단이 3월에 스위스를 방문해 연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월에 연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 준비 중”이라며 “북한 측도 오겠다는 뜻을 밝혔고 명단을 받아야 비자도 준비하는데 아직 누가 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대표단이 이번 연수 과정에서 풍력 발전기를 직접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가페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농업 개발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캠퍼스 퓨어 크리스투스’(Campus fur Chritus)와 함께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돕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북한의 황해북도 황주군에 300W와 2kW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1대씩 설치하고 이에 관한 선진 기술을 전수했다.

최근 영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도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조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기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신보 “北, 클린턴 아시아 방문 주시”

-- 2월 16일 연합뉴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오바마 정권의 첫 아시아 외교’라며 “조선(북한)은 대화와 대결을 가리는 척도를 가지고 첫 아시아 외교의 성패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행각과 조선반도 정세’ 제목의 글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언론들은 북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떠들었다”며 “미군과 남조선군이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무력증강이 다그쳐지고 호전세력은 ‘북의 급변사태’와 ‘선제공격’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반목과 대립은 위험수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사태방치는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경고하는 교전 상대방(북)의 의도를 해석하고 6자회담 참가국

들과의 정책조율 과정에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번 클린턴 국무장관의 한국, 일본, 중국 순방과정에서 대북 메시지에 주목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문은 “미군과 남조선군에 자체의 기색은 별로 없다”며 “매년 3월에는 미군-남조선군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는데 조선인민군은 적군의 연습을 임의의 시각에 자기 나라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군사적 기도의 발로로 본다”면서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신보는 “현 상황은 조선 인민군으로 하여금 전쟁도발에 대처하는 자위적 조치를 강구하고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는 데로 떠밀고 있다”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이 방어적 차원의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클린턴, 北에 경고와 구애 메시지”<CNN>

-- 2월 16일 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및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앞서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핵프로그램 폐기시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구애를 함께 했다고 CNN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CNN은 클린턴 장관이 지난 13일 뉴욕 아시아소사이터에서 45분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한에 대해 침략행위를 하지 않으면 북한과 영구적인 평화를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을 통해 경고와 구애가 담긴 대북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라는 화해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장관은 북한측에 ‘남한에 대해 어떠한 도발 행위나 도움이 되지 않는 공격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CNN은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WP)는 클린턴 장관이 아시아소사이터 연설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어느 관리들보다도 훨씬 분명하게 북한에 관계정상화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클린턴 장관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되면”이라는 전제 아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관계정상화와 평화조약, 에너지 및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北 긴장조성은 협상 전략” <르피가로>

-- 2월 16일 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번째 생일(16일)을 앞두고 남북한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새로 출범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주의를 끌기 위한 김 위원장의 허세로 보인다고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가 전문가들의 진단을 인용해 전했다.

르 피가로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서울'이란 제하의 13일자 기사에서 북한의 호전적인 수사에 익숙한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하는 가운데 북한이 중대한 흥정을 염두에 두고 긴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 외교관은 "(북한의 긴장고조는) 고전적인 수법"이라며 "우세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지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북한이 2006년 조지 부시 당시 행정부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핵실험을 한 적이 있다면서 "이런 설명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의 한국 방문(19-20일) 소식으로 더욱 신뢰가 간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더욱 잘하기 위해 한국과 등을 돌리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서 고전적인 무기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난제 산적한 亥통일 ... 행보 '주목'

-- 2월 16일 연합뉴스

북한이 대남 '전면적 대결태세'를 거론하고 미사일 발사 준비를 착착 진행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현인택 통일장관이 취임함으로써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 강경입장으로 정책적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현 장관으로서는 당분간 대화 재개를 대비한 내부 준비를 하는 한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통일부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등의 과제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현 장관은 지난 12일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 한 측면에서 북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시간·장소·의제를 열어 놓고 만나겠다는 뜻을 표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적극 협력할 것"을 공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엄혹하다. 북한이 '전면적 대결태세' 및 '과거 정치·군사 관련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한데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서해안에서의 해안포 훈련 횟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현재 통일부 관계자들은 현 상황에서 현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남북대화나 대북지원 문제를 정부 안에서 공론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북에 원칙을 견지하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한

정부로서는 적극적인 대북 접근이 북한의 압박에 흔들리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 정세로 미뤄 우리가 대화 또는 인도적 지원 제의를 하더라도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현 장관으로서 북·미 대화와 북핵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대화 재개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대북 정책과 관련한 대내 홍보를 강화하는 일 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와 관련, 현 장관은 취임사에서 "상생과 공영"이라는 목표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정밀한 계획서와 알찬 시방서를 만들 차례"라며 비핵·개방 3000의 세부 이행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클린턴 北에 부드러운 논조" <NYT>

-- 2월 17일 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한·중·일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북한에 더 부드러운 논조를 취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첫 순방국인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클린턴 장관이 미국은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한다면 매우 관대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해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클린턴은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완전하게 핵을 폐기하고 비핵화를 하는 쪽으로 향한다면 미국의 입장은 북한과 함께 일하는데 매우 관대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단지 외교적인 면 뿐이 아니며, 미국은 식량과 연료는 물론 에너지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도울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13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도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와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할 경우 경제 지원과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정책에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 논조는 이전의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비해서는 뚜렷하게 부드러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北, 품질관리 중요성 강조

-- 2월 17일 연합뉴스

북한이 '제품 질 제고 대책 월간'인 2월을 맞아 생산 현장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 하고 있다.

17일 입수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최근호 (2.12)는 '<제품 질 제고 대책 월간> 사업을 짜고들자'라는 글에서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개선"해야 주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원단위 소비기준 (자재, 설비 등을 규정에 따라 소비하는 표준량)을 엄격히 지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원료, 자재의 낭비를 없애는 등 경제조직 사업을 실리가 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또 모든 공장과 기업소들에서 "과학적인 품질 관리 질서를 세우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질에 대한 총화평가 사업을 실속있게" 해야 하며 "계량계측 사업을 개선해 경제 관리를 과학화"하고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제품전시회, 질 품평회, 현상응모와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이 질 제고 사업에 관심을 돌려 가치있는 착상들과 의견들을 내놓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98년부터 매년 2월과 7월을 '제품 질 제고 대책' 월간으로 정해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北매체 “美, 北핵억제력 무력제거 하려해”

-- 2월 17일 연합뉴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비책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미 호전세력들의 전쟁 공갈 책동이 수수방관할 수 없는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이날 '호전광들은 분별없이 날뛰지 말라'는 제목의 글에서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미 호전세력들의 제2조선전쟁 도발계획이 실행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증하는 증거”라며 “그의 폭언은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로의 무력 집결과 전쟁계획 완성, 군사연습 소동 등 미군의 부산스러운 움직임들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미군이 지난해 한반도 주변의 육·해·공군력을 증강한 데 이어 올해도 “우리의 핵 억제력을 무력행사의 방법으로 제거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남한과 함께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구실과 계기를 더욱 많이 마련하는 것

뿐”이며 ““핵무기 통제력 상실 가능성”을 들고 나온 것도 그를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연평도 걸으론 '평온' ... “꽃게철이 걱정”

-- 2월 17일 연합뉴스

“중국어선이 물러간 뒤 연평도의 겨울은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북한의 '대남 대결태세' 선언 등이 있는 후 군-관의 관심이 온통 집중된 서해 외딴 섬 연평도의 겨울은 뜻밖에 평온하기만 하다.

17일 연평도 주민들은 올해 꽃게잡이가 본격 시작되는 3~4월을 앞두고 막바지 겨울나기에 한창이다.

이곳 어민들은 겨우내 인천과 연평도를 부지런히 오가며 어구 장만과 손질, 선원 모집 등을 끝마쳤으며 이제 연평도로 속속 돌아오고 있다.

이르면 3월 중 인천~연평 항로 준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착공되는 데다 날씨가 풀리면 봄맞이 관광객 등이 대거 섬을 찾을 것으로 보여 오는 3월은 연평도의 1년 중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달로 기록될 것이다.

연평도 주민 송모(47.여) 씨는 “출어 준비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섬을 잠시 떠나 있던 어민들이 속속 들어오고 방학을 맞아 인천 등지에서 학원을 다니던 학생들도 개학을 앞두고 돌아오는 등 연평도가 모처럼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는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올해 꽃게잡이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집중된다.

지난 4일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바다에서 중국어선이 한꺼번에 자취를 감추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서 군-관이 서해 5도 해상에서 남북간 우발적인 충돌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껏 예민해져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바다에서 중국어선이 사라진 것은 기쁜 일이지만 군-관에 의한 꽃게 조업 통제가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北김정일, 제333호 선거구 후보 등록

-- 2월 17일 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는 3월 8일 치러질 최고 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에서 군인 선거구인 제333호 선거구에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 전역의 모든 선거자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모든 선거구 선거자 회의에서 자신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에 대해 이는 “우리 당에 대한 전체 인민군 장병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

리의 표시이며 당의 선군혁명 영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같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1일 제333호 선거구에서 김 위원장을 제 12기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첫 모임을 개최한 이후 모든 선거구에서 그를 후보자로 추대했다.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법은 대의원 후보자가 한 선거구에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北, 미국의 ‘관계정상화-평화협정’ 제안 거부”

-- 2월 17일 노컷뉴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위협등 강경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대타협’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셀리그 해리슨(Selig.S Harrison) 美 국제정책센터(CIP-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법”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대타협’의 내용과 향후 대북정책의 틀을 제시했다.

해리슨 국장은 평양을 방문하는 길에 6자회담 북측 차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과 만나 북한이 핵폐기 합의를 통해 신고한 68파운드(30.8Kg)의 플루토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대신 미국은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의미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는 등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해리슨 국장은 덧붙였다.

해리슨 국장의 이같은 ‘대타협’ 제안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밝힌 언급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최근 제기됐던 이른바 ‘힐러리 친서’ 전달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일본 산케이 신문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로 내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前대사가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힐러리 장관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대타협’을 제안한 해리슨 국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만큼 친서전달의 주역이 해리슨 국장일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미국 민간단체, 올해 대북 지원 확대

-- 2월 18일 노컷뉴스

미국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보건, 의료, 식량,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

간단체 ‘월드 비전’은 황해북도 연탄군 도치리에 설치한 태양열 발전기 사업을 칠봉리 등 인근 마을로 확대하고 평안남도 안주와 개천에 있는 라면 공장도 두유 제조 공장에 올해 첫 지원분인 밀가루를 북한에 보냈다.

빅터 슈 월드 비전 북한사업 국장은 “이달 초 평안남도 안주와 개천, 황해북도 연탄 등을 방문해 지난해 지원한 물품의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고, 북한 당국자들과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빅터 슈 국장은 “라면공장과 제분공장 등에서 월드 비전이 이전에 지원한 밀가루를 잘 받았고, 안주와 개천의 병원, 유치원 등에서도 의약품과 내복 등 지원품이 제대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올해 새로운 지원물품이 한 달 정도 후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 국장은 “1년에 평균 1천 톤 가량의 밀가루를 북한에 보내기로 하고 열흘 전 올해 첫 선적분으로 1백20 톤의 밀가루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카어즈’도 올해 2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의약품과 의료용품은 물론 북한의 보건 의료 교육을 위해 의료용 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 내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13년 째 대북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셸리 말호트라 아메리카어즈 북한 담당관은 “북한 정부 내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민간단체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여하기 때문에 세관 통과 등의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매우 빠르며, 지원 과정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럽기업단 방북, IT·농업투자 모색” <RFA>

-- 2월 18일 연합뉴스

유럽 기업들로 구성된 대북 사업단이 오는 5월 9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유럽 사업단을 이끌고 방북했던 네덜란드 GPI건설터사의 폴 치아 대표는 “(올해는) 더 다양한 나라와 분야의 기업들이 동참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는 정보기술(IT)과 농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북한 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과 유럽간 긴장은 없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에 사업체가 진출하는 데 영향은 없다”며 “지난해 방문 때도 그랬지만 북한 당국은 유럽 기업들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5월 평양에서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방북했던 유럽사업단중 일부 기업은 휴대

전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관한 계약을 북한측과 맺고 사업을 확대했으며, 다른 기업은 북한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섬유와 의류품을 생산하는 등 북한에서 활발히 사업하고 있다고 RFA는 소개했다.

방북에 앞서 내달초 네덜란드의 헤이그상공회의소는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행사에는 네덜란드와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北 3남 김정운 후계자로 부상 ... 정부는 여전히 신중

-- 2월 18일 노컷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운(26세)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일본 마이니찌(毎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와 대북 전문가들은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최고권력의 후계 이양 작업이 진행 중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마이니찌 신문은 17일 자에서 북한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지난달초 김정운을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내부 통달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3남 김정운은 김 위원장이 세번째 부인인 고 고영희 씨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으로 차남 김정철의 바로 아랫동생이다.

정남·정철 형제는 성혜림이 낳은 장남 김정남과 함께 북한 후계자 후보군에 끊임없이 이름을 올렸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본처가 아닌 성혜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데다 그간의 언동과 행동도 후계자로서 자격미달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본인도 올초 베이징에서 후계자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둘째인 김정철은 노동당 선전부와 조직지도부에서 일하면서 후계수업을 받아왔지만 여성호르몬 과다라는 희귀 병을 앓고 마약중독설도 흘러나오는 등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김정남은 지난 2007년까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후계 수업을 받았고 김정남과 김정철에 비해 용모와 성격이 김 위원장을 쏙 빼닮아 김 위원장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도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 신문이 김정운을 지목한 사례가 있다. 당시 산케이는 김 위원장이 김정운을 후계자로 낙점하고 관련 ‘교시’를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하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정일 후계구도와 관련해 모종의 작업이 북한내에서 착실히 진행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김정운 후계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북 후계구도와 관련해 객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군부의 대남강경노선 선언 등으로 후계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맞지만 아직 단정내리기에는 이르다는 것.

北군부, 南에 “전면 대결태세 잊지 말라”

-- 2월 19일 연합뉴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8일 남한 사회의 안보불안과 남남갈등은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남한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면서 남한 정부가 반복 “적대감을 고취하고 북침 전쟁광증에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북한 군대와 인민의 “무자비하고 강력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군이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남한 정부가 “반공화국 대결”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 이미 천명한 북한군의 “불변의 입장”을 다시 상기시킨다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의 대응 징벌은 시대의 요구와 민심의 분노가 만장약된 값비싼 징벌”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달 17일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北 미사일 발사해도 대화 계속 전망”

-- 2월 19일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의 경고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공개 규탄하고 이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려 할 수도 있으나 북핵 6자회담의 지속을 위해 북한과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앤드루 세멀 전 미 국무부 핵비확산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전망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했다.

세멀 전 부차관보는 18일 미국 워싱턴의 세계반테러협력센터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한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란과 함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해 항상 미국의 주요 우려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이 미국 뿐 아니라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의 대책과

관련, 그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미사일 발사가 테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 北 미사일 발사시 UN회부 가능성...대화는 계속”

-- 2월 19일 헤럴드경제

북한이 미국의 경고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공개 규탄하고 이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려 할 수도 있으나 북핵 6자회담의 지속을 위해 북한과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19일 나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앤드루 세멀 전 미 국무부 핵비확산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18일 미국 워싱턴의 세계반테러협력센터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한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란과 함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해 항상 미국의 주요 우려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세멀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이 미국 뿐 아니라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의 대책과 관련, 그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미사일 발사가 테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개성공단 야근비 인상...두달 체불때 영업정지

-- 2월 19일 노컷뉴스

북한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야근 근무자의 임금을 50% 인상하고 체불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대북시민단체가 밝혔다.

대북시민단체인 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은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말 개성공단 야근 근무조 근로자들의 임금을 현재보다 50% 인상하고 임금을 1개월 체불할때는 벌금을 부과하며, 2개월 체불때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12.1 조치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 등으로 주문량이 대폭 줄어 어렵게 사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측이 야근 근무조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입주업체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북측 근로자 1명의 출퇴근 교통 보조금으로 매달 10달러 가운데 5달

러를 지원해 주었으나 올 1월부터 수익자부담 원칙을 내세워 입주 기업들에게 전액 부담시켜 경영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임금을 달러로 지불해야하는 조건에서 환율 인상으로 사실상 30-45% 정도 부담이 늘어난데 다, 물가 인상으로 간식 등 음식 재료도 1명에 월 25-30달러 정도 추가 부담이 생겨 사실상 근로자 1명에 월 평균 130- 150달러 지불(환율인상 포함)해 임금 경쟁력에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포럼은 “개성공단에는 현재 7개 업체가 임금 체불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입출경 인원과 차량 제한으로 통행문제가 과거보다 어려워지고 생산품의 반입이나 원자재 반출을 희망하는 시간 내에 할수 없어 기업들에 영업 손실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6자 북핵실무회의, 北미사일 거론 안해

-- 2월 20일 연합뉴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5개 실무그룹 회의 중 하나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19일 오전 10시 (현지시각) 의장국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했다.

특히 ‘2.13 합의’의 산물인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은 물론 다른 어느 국가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에서 오후 5시까지 열린 첫날 회의에서는 실무그룹 회의 대표들은 의견 충돌이나 대립 없이 시종일관 긍정적 기조를 견지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초안을 마련해 회람시킨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2차 초안에 대해 각국의 견해를 밝히고 이견을 조율했다.

러시아는 해상 조난 구조 및 테러 대응 등에서의 협력과 같이 6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초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대표들은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기본 원칙의 필요성을 저마다 강조하면서 기본원칙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틀간 회의에서 ‘기본원칙’이 채택될 경우를 가정해 이를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실무그룹 회의는 지난 2007년 3월 베이징(北京), 같은 해 8월 모스크바 회의 이후 세 번째로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첫 6자 회동인데다 지난해 12월 베이징 6자 수석 대표 회담에서 검증 의정서 타결에 실패하면서 침체한 6자회담의 모멘텀을 되살릴 수 있을지 관

심을 끌고 있다.

“美, 北과 ‘先평화 後비핵화’ 모색해야”

-- 2월 20일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과 영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 2명이 주장했다. 미국의 한국정책연구소의 폴 리엄 소장과 크리스틴 안 특별 연구원은 20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 등 대북 관계에 관해선 전임 빌 클린턴, 조지 부시 행정부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의 발언을 인용, “평화협정은 북한의 정통성 및 생존권에 대한 의문을 제거하는 관계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에 핵무장 해제를 먼저 요구할 게 아니라 과감히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성인68% “남북한 군사충돌 가능성 있다”

-- 2월 14일 연합뉴스

성인의 68.2%가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한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있다”라고 답했다고 SBS가 20일 밝혔다. 이 결과는 이날 자정 방송되는 SBS TV ‘시사토론-충돌위기 남북관계, 해법은?’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한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7.9%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불안을 못 느낀다’가 49.7%로, ‘불안을 느낀다’의 47.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 지난 1년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49%(‘대체로 잘못’ 20.6%, ‘매우 잘못’ 28.4%)로, 긍정적 평가 27.8%(‘상당히 잘함’ 11.1%, ‘대체로 잘함’ 16.7%) 보다 많이 나왔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23.2%였다.

玄통일 “北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 용의”

-- 2월 20일 연합뉴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든, 어떤 방식이든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 장관은 또 ▲상호존중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보장과 통일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병행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남강경조치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강경조치에 대해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남북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논평없이 군 경계태세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남북 지하자원 개발협력 추진 ▲철도및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 협의 추진, 향후 대륙철도(TCR, TSR) 등과 연결 ▲가스관 연결사업(PNG) 추진 지원을 도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北후계구도 언급 금기 깨”<NYT>

-- 2월 22일 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외교관들이 북한의 후계구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금기(터부)를 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클린턴 장관은 19일 방한에 앞서 서울행 비행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는 후계 문제를 둘러싼 내부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북한 지도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인접 국가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깊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 같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과 관련, 이것이 중국과 같은 6자회담 당사국들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초보자로서의 실수인지, 아니면 지난 8년간의 외교적 교착상태를 뒤흔들기 위한 접근법인 신선한 솔직함을 보여준 것인지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체제의 불투명성을 거론하면서도 “클린턴 장관의 발언을 말 의미 그대로 두고 싶다”며 “그는 국무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중국이 듣고자하는 메시지는 아니라면서 중국은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북한 전문가를 체포하기도 했다고 전해 중국이 이 문제에 민감한 입장을 소개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클린턴 장관의 발언을 전하면서 북한의 권력 승계 절차가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신호들이 커지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 관계

자들이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李국방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발언 ... 北 자극?

-- 2월 21일 노컷뉴스

북한이 만약 서해상에서 우리 함정을 공격하는 등의 군사도발을 감행하면 발사지점을 타격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군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군강국의 적극대응 의지 선언은 현상황을 ‘준전시상태’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것 자체도 도발로 간주한다”며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에는 타격 지점에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출석해 북한이 해안포나 장사정포, 미사일 등으로 우리 함정을 공격할 경우 북측 영토인 ‘타격 지점’을 공격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또 “적의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하는 한편 (북한군이) 분명히 공격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지점은 공격받아야 한다”며 “이는 보복 공격이 아니라 대응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 전면대결태세’ 선언과 같은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간 합의사항 무효화 주장 이후 국방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유감을 표현한다는 수준의 원칙적인 대응에 그쳤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국방책임자로서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이 이 국방장관의 단호한 의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현재 북에 의해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이 장관의 적극 대응 발언은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을 자극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1월 남북교역 작년 대비 20% ↓

-- 2월 22일 연합뉴스

지난 달 남북 교역규모가 작년 1월에 비해 19.6% 감소했다고 통일부가 22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남북교역은 반입 6천900만 달러, 반출 4천400만달러로 총 1억1천300만달러를 기록, 작년 1월(1억4천50만4천달러)에 비해 19.6%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월간 남북 교역액은 작년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하락했다.

통일부는 남북교역량 감소 배경에 대해 “고환율과 국

내 경기 침체, 북한의 지속적인 남북관계 상황 악화 조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남북 군사력 비교..北 보유 장비수 우세

-- 2월 23일 연합뉴스

한국군	병력(병사)	북한군
52만2천여 명(-1만9천여명)	육군	102만여 명(+2만여명)
6만8천여 명	해군	6만여 명
6만5천여 명	공군	11만여 명
65만5천여 명(-1만9천여명)	계	119만여 명(+2만여명)
육군		
10(특전사 포함)(-2)	군단(군)	15(-4)
46(-4)	사단	86(+11)
15(-4)	기동여단	69(고도10여개 미포함)
2,300여 대	전차	3,900여 대(+200)
2,400여 대(-100)	장갑차	2,100여 대
5,200여 문(+100)	야포	8,500여 문
200여 문	다련장/방사포	5,100여 문(+300)
30여 기(발사대)(+10)	지대지유도무기	100여 기(발사대)(+20)
해군		
120여 척	전투함정	420여 척
10여 척	상륙함정	260여 척
10여 척	기뢰전 함정	3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30여 척
1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10)
공군		
490여 대(-10)	전투임무기	840여 대(+20)
50여 대 (해군 항공기 포함)	감시통제기	30여 대
40여 대	공중기동기(AN-2포함)	330여 대
170여 대	훈련기	180여 대
680여 대 (육·해·공 통합)	헬기	310여 대
304만여 명	예비병력	770만여 명*

“클린턴 亞순방, ‘스타성’ 이용한 스마트외교 빛나”

-- 2월 23일 뉴시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이번 아시아 4개 국 순방은 자신의 ‘스타파워’를 십분 활용한 것으로, 미 행정부의 변화된 외교적 접근법을 보여줬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 퍼스트레이디 출신인 클린턴 장관이 이번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자신의 ‘초특급 스타파워’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기후변화, 금융위기에 대한 협력을 호소했다며 특히 과거 터부시되던 북한의 후계 문제에 대한 언급과 중

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한 발 물러선 발언은 일각의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클린턴 장관은 이에 대해 의연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특히 이번 방문 기간 클린턴 장관이 보여준 대중과의 친밀한 접촉에 주목하며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와의 외교적 접촉과 대중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결합시킨 ‘스마트파워’의 표본이 됐다”고 분석했다.

Obama to talk economy, North Korea with Japan PM
오바마가 일본수상과 경제와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 2월 18일 Focus Information Agency

출처:<http://www.focus-fen.net/index.php?id=n171276>

Washington. US President Barack Obama will host Japanese Prime Minister Taro Aso in Washington on February 24 to discus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North Korea, the White House said Tuesday.

“Japan is a close friend and a key all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discussing ways in which the two countries can strengthen cooperation on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White House spokesman Robert Gibbs said in a statement, AFP informs.

“The two leaders will consult on effective measures to respon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will discuss North Korea and other issues.”

On the first full day of her Asian tour,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ought to reassure Japan by backing it on North Korea and announcing that Aso would be the first foreign leader to visit the White House since Obama was inaugurated last month.

백악관은 지난 화요일 오바마 미대통령이 일본 총리 타로 아소를 2월 24일 백악관에서 접견하고 세계 경제 위기와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는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이 ‘일본은 미국의 가까운 우방이자 핵심적인 동맹국이며 미대통령은 양국이 지역적인 그리고 전지구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한 효과적인 방안과 북한문제 및 기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아시아방문 첫날 북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여 일본을 안심시키고자 하였고, 아소가 오바마 취임 후 백악관에 방문하는 최초의 외국 정상임을 천명했다.

North Korea ‘ready for war with South’

북한이 ‘남한과 전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함

-- 2월 19일 Guardian

출처:<http://www.guardian.co.uk/world/2009/feb/19/hillary-clinton-korea-war>

North Korea said today that it was ready for war with the South, hours before Hillary Clinton’s arrival in Seoul on the latest leg of her maiden tour as US secretary of state.

Pyeongyang has ratcheted up its rhetoric in recent weeks and is thought to be preparing for a missile launch, in what many see as an attempt to grab the attention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put pressure on South Korea. It has hinted that it seeks a rapprochement with the US while repeatedly threatening its neighbour.

“[The South Korean president’s] group of traitors should never forget that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is fully ready for an all-out confrontation,” the North’s KCNA news agency said, quoting an unnamed military official.

It added that the country could be forced to counter-strike against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drills announced yesterday, which Seoul and Washington say are defensive.

.....

북한이 오늘 힐러리 클린턴의 미국무장관으로 첫 서울 방문 수시간 전에 남한과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남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하여 최근 수주간 표현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남한을 계속하여 압박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도발적인 행동을 멈출것을 촉구하였다

“翻譯家”蓮池薫さん 北の映画事情語る 新潟

번역가 하스이케 카오루(蓮池 薫)씨, 니가타에서 북한의 영화 사정을 말하다 -- 2월 22일 산케이신문

北朝鮮による拉致被害者で翻譯家の蓮池薫さん(51)が21日、新潟市中央区の新潟市民プラザで開かれた「第19回にいがた国際映画祭」のトークショーに出演、北朝鮮の映画事情についてユーモアを交えて語った。

蓮池さんは、自身が小説版の翻訳を手がけた韓国映画「ハピネス」の上映後に登場。約400人の聴衆を前に、北朝鮮では外国映画の吹き替いを1人でしていたエピソードを紹介した。「1990年代初め、金丸訪朝団を迎え、日本熱が高まったとき、なぜか『雪女』が上映された」と明かし、会場の笑いを誘った。

납치 피해자인 번역가 하스이케 카오루씨(51)가 21일 니가타시민 플라자에서 열린 「제19회 주형 국제영화제」 토크쇼에 출연, 북한의 영화 사정에 대해 말했다.

하스이케씨는 자신이 번역한 한국영화 「행복」의 상영 후에 등장. 약 400명의 청중을 앞에 두고, 북한에서는 외국 영화의 더빙을 1명이 하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1990년대 초, 카메라루 북한방문단을 맞이해 일본 열풍이 불었을 때, (일본 영화인) 「설녀」가 상영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추천 논문

2009년 북한의 식량 수급 현황과 남북한 협력과제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촌진흥청은 200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31만 톤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7.5%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UN 식량농업기구는 이보다 100만 톤이나 낮은 334만 톤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을 아무리 낮게 잡아도 520만 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북한의 작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90만 톤가량 외부에서 조달해야만 한다.

북한이 상업적 수입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인이 선호하는 중단립종 쌀은 현재 톤당 가격이 1,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곡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곡물과동 이전보다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곡물시장에서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려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지난해 가을부터 불어 닥친 국제금융위기와 세계 각국의 경제 침체는 북한을 비롯한 식량부족국가에 대한 대외 원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년 미국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식량 지원분 이외에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점도 한국이 북한에 식량과 비료 지원을 하기 어렵게 한다.

북한의 상업적 수입과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가능성을 감안할 때 30-6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만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차원의 식량 수급 상황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나아졌지만 개별 가구 차원에서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최근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움직임이 강하고, 협동농장에 대한 경영 간섭과 통제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주민들의 식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내년도 식량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해답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을 신속히 이행하고, 남북협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정부는 향후 남북한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북정책의 원칙과 목표를 재차 확인하고, 협력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칙에는 철저히되 비료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유연한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한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2009년부터 식량지원을 기존의 차관 형태에서 무상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차관은 상업적 형태의 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차관 제공에 대한 경제적 조건만 충족되면 되지만 무상지원은 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 방식,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남북 당국이 이를 협의, 합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상지원을 추진하기보다는 분위기가 성숙할 때까지 차관 형식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남북경색의 원인이 양대 선언 이행에 대한 남북간의 시각 차이에 있는만큼 2007년 104 정상선언 및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동의를 기초로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할 준비도 갖추어야 한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rei.re.kr/kor/issue/report_view.php?reportid=E02-2008-04&keyword=북한농업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 韓·美軍의 연례훈련을 비난

○ 지난 2월19일 북한 중앙통신은 韓·美軍의 연례훈련을 “무력 증강과 북침전쟁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북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렀으며 물리적 충돌만이 시간문제로 남아 있다”고 위협했다. 또한, 방송은 “호전광들의 反공화국 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오극렬 黨작전부장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

○ 지난 2월20일 북한 중앙통신은 “2.19.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및 黨 중앙군사위원장 명의의 결정문을 통해 오극렬(인민군 대장)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고 간략히 보도하였다.